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징역 25년' 구형... "벌 달게 받겠다"

취업제한 10년과 전자발찌 20년 부착도 청구

검찰 "범행수법 잔혹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

검찰이 7일 구미 3세 여아를 빈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받는 김모(22)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아동관련 취업제한 10년과 전자발찌 20년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김씨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이윤호)는 이날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법원은 지난달 9일 열린 첫 공판에서 확인된 공소사실에 이어 김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 심리했다.

단발머리에 초록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김씨는 두손으로 각지를 낀 채 재판장에 입장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홀로 원룸에 남겨두고 나온 후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친인척에게 보호를 요청하지 않은 채 지난해 8월 중순께 사망하게 한 살인 범죄를 저지른 정황을 볼 때 다시 범할 우려가 있다"며 전자발찌 부착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재판부 입장에 따르겠다"고 했다.

검찰은 변론 종결에 앞서 "아동학대는 스스로 보호하거나 피해를 호소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장시간 은밀하게 범해지는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생후 29개월 어린아이를 무더

운 여름날 물 한 모금 먹지 못한 채 사망했을 피해자의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아동학대 범죄 엄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25년,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 변호인은 "비난 받아 마땅하나 애초부터 살인의 고의성 없고 우발적인 범행이다"며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최대한 관대한 선고를 해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진술을 들던 김씨는 눈물을 흘리며 "뒤늦게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겠지만 저한테도... 주시는 벌 달게 받겠다. 죄송합니다"라고 흐느꼈다.

이날 재판에는 김씨의 전 남편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석씨의 남편이 방청객으로 참석해 김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을 지켜봤다.

김씨의 전 남편은 재판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오늘 구형이 있다고 해서 와 본 것 뿐이다"며 심경을 묻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김씨의 아버지는 방청석에 들어서기 전 질문을 하는 취재진들에게 "육언어먹기 전에 불지 마라"며 큰소리를 쳤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6월4일 오후 1시50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는 음식물이 제공되지 않으면 아이가 사망할 것을 예견하고도 지난해 8월 여아를 홀로 빌라에 남겨둬 이로 인해 숨지게 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아이가 숨진 후인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받은 사실도 인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초께 이사하면



구미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언니 김모(22)씨가 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 빈집에 아이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3월12일 구속됐다. 숨진 여아는 유전자(DNA) 검사에

서 김씨가 아닌 외할머니로 여겨 온 석모(48)씨의 딸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정기자



황사가 물러난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에 시민들이 휴일을 즐기고 있다.

고흥 해상서 물질하다가 실종된 70대 해녀 숨진 채 발견

고흥 해상에서 물질 작업 중 실종된 70대 해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9일 오전 10시 18분께 고흥군 도양읍 득량도 남서방 해안가에서 실종 해녀 A(74·여) 씨가 엎드린 채 숨져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A 씨는 8일 오후 3시 58분께 고흥

군 도양읍 득량도 서방 100m 앞 해상에서 바다에 들어간 뒤 나오지 않자 함께 작업하던 1t급 어선 선장이 해경에 신고했다.

어선 선장은 평소 약 2시간 정도 잠수하는데 3시간이 지나도 물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해경은 사고해역 주변에 경비함정

5척과 항공기 1대, 민간구조선 5척을 동원해 해상 및 수중에서 집중 수색했다.

북동파출소 연안 구조정이 득량도 서쪽 해안가 실종자 수색 중 해안가에서 엎드린 채 슈트를 착용하고 숨져 있는 A 씨를 발견했다.

기동취재본부

"지휘부가 백신 접종 강요"...현직 경찰관, 인권위 진정

지난달 인권위 홈페이지 통해 진정 제출

"약속과 달리 반강제적으로 맞도록 강요"

"직원들 인권 존중하지 않는 지휘부 경중"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있다. 이날 경찰과 소방관 등 사회필수인력의 예방접종이 시작됐다.

현직 경찰관이 경찰 지휘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 김해 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인 김기

범 경사는 지난달 30일 인권위 홈페이지를 통해 경찰 지휘부가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을 담은 진정을 냈다.

김 경사는 진정서에서 "경찰 지휘부가 백신 접종 여부를 자율에

맡기겠다던 약속과는 달리 반강제적으로 맞도록 했다"며 "접종률을 높이려는 지휘부 지시를 받은 간부들이 경찰서·과별·지구대별 접종 예약률을 비교하며 직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지휘부는 범죄 피의자와 피해자에 대한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며 "물론 이것은 옳은 방향이지만 정작 직원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지휘부에 대한 경중을 울리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사는 지난 6월 경찰 내부 통합 포털 게시판 '폴넷'에 인권위 진정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질병관리청이 6월 예정이었던 경찰관·해양경찰관·소방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4월말로 앞당겼다. 그러나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경찰관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날까지 AZ백신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오유나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